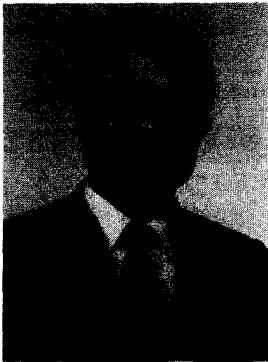


# 95년 우리 경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安 忠 榮**

<중앙대 교수, 경제학>

■ 目 次 ■

- I. 世界化의 원년
- II. 최근의 景氣動向
- III. 史上 최대 엔高, 달러貨 폭락
- IV. 안정기조의 정착
- V. 민간자율경제의 창달과 中小企業의 육성
- VI. 결 론

## I. 世界化의 원년

1995년은 한국경제 발전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WTO체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틀로 출범하고 우리나라는 내년도 OECD 가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전반에 걸쳐 「世界化」를 국가경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올해를 世界化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경제운용에서 세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작년 말에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필두로 일단의 경제개혁 조치를 기획하고 있다. 한편 경제규모 면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 대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어 성숙 개도국의 위상을 넘어 선진국 대열에 더욱 근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절대규모 면에서는 세계 11위권에 진입하였고 무역규모면에서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다. 산업구조면에서도 선진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자, 기계류, 자동차 등이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지금 한국경제의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행위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쉽게 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열강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여야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WTO체제의 출범은 우리 경제운용의 투명성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무국경 지구촌 경제 속에서 무한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의 문지방에 서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경제의 세계화란 결국 선진국의 모범수준으로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고쳐 세계적 초일류상품을 만들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하고 구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경제운용의 핵심은 선진경제의 일반적 운용원리에 더욱 근접하면서 경제의 장기적 내실을 다지고 효율을 더욱 높여 가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최근의 경기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달러화의 사상 최대 폭락사태의 파장을 살펴본 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단기적 정책취향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최근의 景氣動向

작년도 우리 경제는 GDP 기준으로 8.4%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작년 초부터 미동하던 경기상승세가 올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도 4/4분기부터 생산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작년도 4/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제조업 생산이 13.8%나 증가하고 제조업의 가동률도 80년대 중반의 호황기 이래 가장 높은 85%를 기록하고 있다.

가동률이 이와 같이 [피크]에 오르면서 철강, 석유화학, 유리, 전선 등에서 공급 애로 부문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4/4분기부터 그 동안 부진하였던 경공업의 신장세도 큰 폭으로 늘어나 경기상승세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경기활황은 고용면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을 상회하여 작년도 4/4분기에는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2.25%를 기록하고 있다.

94년 중 소비자물가는 93년의 5.8%와 비슷한 5.6% 수준을 나타낸 반면 생산자물가는 93년보다 2.0%나 높은 3.9%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경기확장세가 지속되면 수요면에서 상승압력이 증대되고 공공요금에 현실화되고 국제원자재 및 임금 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이 가중될 경우 인플레이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상수지는 94년 중 경기상승으로 수입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역외수지의 적자 확대로 93년도의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94년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47억 달러를 기

록하기에 이르렀다. 경상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자유화의 확대와 국내외의 금리차이 때문에 자본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원화의 對美달러 환율은 작년동안 2.5%나 절상되었다.

제조업의 설비투자과 수출이 성장을 선도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총 고정자본투자는 11.7% 증가했으나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86년 23.5% 이후 가장 높은 23.3%를 기록했다. 특히 4/4분기 중 설비투자 증가율은 30.6%로 지난 79년 2/4분기의 6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와 함께 건설투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2년과 9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경공업도 지난해엔 3.6%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가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경공업이 성장에 가세함에 따라 제조업 성장이 전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93년의 25.4%에서 작년엔 35.8%로 신장되었다.

작년의 성장실적은 GDP기준으로 91년 9.1%를 기록한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4분기와 3/4분기에 7.6%였던 성장률이 4/4분기에는 9.3%를 기록하여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93년 1월 이후 24개월째 상승국면을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기도 최근 다시 일어나고 있는 엔화에 힘입어 활황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기호황 사이클은 과거 경기상승 국면의 평균 기간인 31개월보다 더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일어난 엔화에 힘입어 경기의 활황세가 지속되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7.5%도 초과될 수 있다. GNP의 잠재성장률 7%를 크게 초과하게 되면 물가불안은 관리하기가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경기과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物價안정 속에 성장내실을 다져가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짜야 할 것이다.

### Ⅲ. 史上 최대 엔高, 달러貨 폭락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경기과열속에 잠재성장률을 크게 초과할 수 있는 근거는 3월에 들어서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일고 있는 사상 최대의 엔高와 달러화의 폭락사태이다. 기록적인 달러화의 하락은 우리 경제의 명암을 동시에 던져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의 국제경제를 단일경제권화 되어 가는 양상은 국제외환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6월 21일 달러당 100엔대가 무너진 이후 8개월 만인 올해 3월에 90엔대가 무너졌다. 지금은 달러당 95엔 전후에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전망이 단기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高와 低달러화 현상은 이제 국제경제의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3대 수출대상국인 멕시코경제의 최근 외환위기에 휘말리고 미국경제의 만성적 쌍둥이 적자와 경기둔화로 달러화는 안전한 자본도피처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외환투자가들이 달러화 대신 마르크貨와 엔貨를 선호하고 있다. 영국 베어링은행의 파산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달러화 기축통화기능의 역할이 상실되어 감에 따라 달러화의 약세 기조는 더욱 구조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이 그만큼 불안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의 엔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분야에서는 對日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늘어나는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은 핵심부품의 일본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對日貿易逆調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992-94 기간동안 엔高에 의한 수출증가율은 자동차 31%, 석유화학 27.5%, 반도체 26.2%, 전기·전자부문 19.8%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엔高를 이들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들 산업에서 高附加價値型으로 산업내 분업구조를 개편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일 부품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짜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계류는 아직도 부품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40%에 이르고, 일부 전기·전자제품의 대일 수입의존도도 그만큼 높다. 수치제어선반의 경우 핵심부품은 전적으로 대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노트북 컴퓨터, 산업용 로봇 등은 엔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對日逆調는 더욱 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등의 소극적 대응방식보다 더욱 적극적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엔高와 더불어 엔부채 기업들의 換差損 방지도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고 있다. 국내 상장회사의 전체 엔화부채 총액은 현재 2조원을 넘고 있다. 따라서 엔화가 10% 절상되어도 국내 기업들은 당장 2천억원의 환차손을 입게 된다. 더이상 달러 위주의 외환정책에 한계가 있다. 거래 및 보유 국제통화의 다변화는 물론 엔高의 호기를 최대로 활용하는 산업구조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 Ⅳ. 안정기조의 정착

과열경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물가 안정 속에 올해 경제를 운용하기 위하여 貨金安定과 함께 재정과 금융에서 적정 긴축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올해 거시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정책변수들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여야 될 것이다. 올해는 6월 27일 4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치러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안정기반 위에 적정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당위적 명제가 정치논리 속에 매몰될 공산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貨金安定이 추구되어야 한다. 1987-93년 동안 제조업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7.1%를 기록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10.5%에 불과하다 93년 중반이래 우리나라의 경기선도부문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업종이었으며 내수지향형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불황 속에 허덕이는 경기의 양극화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

엔高에 힘입어 경기호황 대기업 독과점 업종에서 순익률이 올라가고 이들 업종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임금인상의 실현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정치계절을 맞이하여 전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임금안정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勞使紛糾 발생 가능성이 정치계절을 틈타 勞動組合의 정치화현상 때문에 현실로 더욱 크게 촉발되는 것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 불법분규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는 산업사회의 근로기강을 확립시켜야 한다. 임금인상은 노사간 자율교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타결되도록 勞·使·政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작년부터 자본자유화와 외환자유화를 크게 진전시킨 이후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유입이 대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통화증발 및 환율절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기본변수(Economic Fundamentals)의 관리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총수요 면에서 물가상승 및 수입증가 압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통화관리를 긴축적으로 운영하여야 될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경제선진국들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안정기조를 위하여 통화기강(Monetary Discipline)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통화가치의 안정화가 경

제운용에서 최우선 순위를 받고 있다. 우리경제는 산업개발시대에 적용되었던 통화관리의 정치화 현상에 이제 확실한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안정화 목표가 성장목표에 얼마든지 압도될 수 있었던 정책운용 아래서 우리경제의 선진화는 달성되지 않는다.

안정화에 역점을 둔 경제운용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내각의 팽창주의와 성장논리에 견제와 균형을 촉구하기 위하여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뒤쫓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통화기강을 확립하려는 중앙은행의 노력을 내각이 최대로 존중하며 그 틀 속에서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통화운용이 정치논리에서 초연될 수 있는 정도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의 대정부 독립성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은 광의의 정부내의 조직이지만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집행의 독자적 기능을 지녀야 한다. 중앙은행 총재의 위상, 임명, 임기보장면에서 정치논리가 배제되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운영에 필수적인 은행감독기능이 중앙은행에 존속하는 형태의 중앙은행 조직개편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운용에서 아직도 성장논리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로 접어들고 세계 11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입장에서 이제는 안정화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모든 경제부처는 합의하여야 한다. 금융정책 기능과 재정 기능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안정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관철시키기는 제도적으로 훨씬 쉽게 되었다. 따라서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의 정립과 집행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올해 대규모 자본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 긴축만으로 안정화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

용 및 외환자유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금융긴축은 실시되어야 한다. 금리상승 및 환율정상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정도의 금융긴축 이외에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긴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올 6월 27일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지역개발사업의 공약남발과 조기집행 등은 재정팽창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하여 경제운용의 정치화 현상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물가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임금안정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갈등관계를 견지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인플레이 기대심리는 노사협상을 불안케 하고 임금인상을 궁극적으로 불러일으킨다. 통화와 재정의 팽창 → 물가안정 → 임금상승 → 통화기장의 와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기필코 단절되어야 한다. 세계화에 걸맞은 선진경제운용의 핵심은 이와 같은 악순환의 단절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인플레이 수반형 고도성장을 추구한 결과 부동산투기 등 지대추구행위가 만연되었고 이는 소득분배의 악화는 물론 시장경제 기율마저 크게 와해시켰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 실명제를 올해 중에 실시키로 한 김영삼 정부의 경제개혁조치는 합리적 시장경제 창달을 위하여서 절대로 필요한 제도개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운용기조와 결합될 때 우리 경제는 경제선진화를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다.

## V. 민간자율경제의 창달과 中小企業의 육성

WTO체제 아래서 보조금 지급형 산업정책은 이

제 더이상 작동시킬 수 없다. 정부의 직접개입의 폭이 줄어드는 만큼 자원배분의 기본기능은 시장원리에 따른 민간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몇 개 대기업의 매출액이 이제 국가전체 예산을 넘어서고 있다. 세계적 시황과 기술·지식집약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정보 수집과 분석능력은 정부의 관료행정능력(Bureaucratic Capability)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만들고(Rule Setter) 그것이 지켜지는가에 대한 감시자의 기능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은 일정한 원칙아래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정부의 인허가 제도에서 발생하여 왔던 지대추구의 가능성은 이제 소멸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이 저지른 불실 경영의 책임을 국민이 떠맡는 관행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창업과 퇴출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의 보조금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실 경영의 책임은 아무리 그 규모가 크더라도 기업의 책임으로 수습되어야 할 것이다. 구제금융의 특혜가 그 동안 진행되면서 금융산업의 낙후와 함께 은행의 부실채권의 누적은 우리경제의 선진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음을 직시하여야 된다.

한편 정부의 지원적 역할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능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전자, 기계류, 자동차산업 등은 아직도 초기기술·정보형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 성숙지식·기술집약형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들 가공조립형 산업들은 중소기업연합체의 육성을 절대로 필요로 한다. WTO 아래서도 허용되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기능지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산업정책의 골간을 과학·기술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적 지원체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부품산업을 기반으

로 하는 조립가공형으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품산업형 중소기업은 선진美, 日경제구조에 비교하여 크게 취약한 실정에 놓여 있다. 1990년 인구 1000명당 中小제조업체수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3.5개와 2.1개 업체인데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1.6개에 불과하다. 한국, 일본,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의의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상대적 비중은 일본과 미국에 비교하여 크게 劣位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양적 확대와 技術向上을 지향하는 質的改善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과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자영업형, 벤처기업형, 부품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조립산업의 경우 모기업과 부품기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산업내 분업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조립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좌우된다. 일본은 중층적 계열화를 통하여 外製(External sourcing)에 크게 의존하나 美國은 內製(Internal sourcing)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조직 및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품산업의 취약성과 조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母企業과 受給企業 사이에 형성되어 온 下都給 去來構造는 일본의 共生型에 비교하여 葛藤型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열화는 모기업과 수급기업사이에 정보, 기술 때로는 금융에서 상호협조 또는 공유형태가 산업조직상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收益性이 높은 중소기업체를 대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도급 代金の 어음결제기간의 장기화, 또는 대기업이 당면하는 원가상승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때로는 독점 부품업체에 의하여 대기업에 대한 독점력 행사등 機會主義的 해동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모기업과 수급기업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非對稱的, 非協力的 거래관

계가 존재하여 產業內 分業구조가 일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下都給關係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技術開發은 부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中小製造業의 매출액에 대한 技術開發費用은 1991년 현재 0.24%에 불과한 실정이다. 1988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서 88%가 大企業에 의하여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대기업에 의한 연구성과의 확산과 R & D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기술개발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사이의 기술협력관계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이와 함께 技術競爭을 바탕으로 하는 多品種小量生産時代를 맞이하여 中小企業의 기술향상은 우리경제의 경쟁력 고양의 절대적 전제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 VI. 결 론

자본주의의 요체는 공정경쟁시장이 순조롭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가꾸면서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활동전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장치를 대폭으로 강화,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조세행정의 엄정집행과 조세체계의 투명성은 더욱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불공정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시장의 공정거래질서의 파괴행위가 용납되지 않은 법제도의 정비와 감시는 시장경제의 강화를 위하여서도 이제 더이상 유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다자간 환경분야 협상과 노동분야 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도 환경보호형 제도와 생산체계의 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환경파괴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정부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더욱 법제화되어

야 한다. 노사간의 공정협상을 위한 제도 또한 더욱 강화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20%의 결정적 호기를 맞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강화하고 선진경제제도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각종 경제제도를 착근시켜 자유기업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더욱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An injury is much sooner forgotten than an insult.

몸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인 모욕보다 더 빨리 아문다.

—Earl of Chesterfield—